

##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

저자: 아베 신조(安倍晋三)<sup>1)</sup>

번역: 엄경호<sup>2)</sup>

이 글은 아베신조<sup>3)</sup>의 책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sup>4)</sup>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1장. 나의 원점(原點)’, ‘제2장. 자립하는 국가’, ‘제3장. 내셔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제4장. 일·미동맹구조’, ‘제5장. 일본과 아시아 그리고 중국’, ‘제6장. 소자(少子)국가의 미래’, ‘제7장. 교육의 재생’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내용에서는 아베의 정치적 신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2006년 7월, 발간당시 50만부이상 팔려나가면서 이 책을 통해 아베는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구축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아베는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일본의 ‘독립’에 대해 할애하는데, 아베가 주장하는 ‘독립’은 주로 대외관계에서의 ‘외교적 독립’에 관한 것이다. ‘독립’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독립’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주로 정치·군사 면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 일본적 세계전략 구상의 국제정치적 입지강화, 군사력증강을 통한 동북아 현상 유지역할 등 ‘독립’적인 국가 행동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내용이 ‘제4장 일·미동맹의 구도’와 ‘제5장 일본과 아시아 그리고 중국’이며 본 글은 이 부분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 이 책의 저자 아베는 누구인가?

아베 신조(安倍晋三、あべ しんぞ)는 1954년 동경에서 태어난 전 후 세대이며 세이케이(成蹊,せいけい)학원 소속의 초등·중등·고등·대학교(법학)를 졸업하고 고베제강소(神戸製鋼所)에 입사 후 미국 뉴욕 연수생활 후 본사에서 근무 중 1982년,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安倍 晋太郎)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다. 아베는 2006년 1차 내각총리대신에 취임 후 1년여 만에 실각한 후, 2012년 제 96대 내각총리대신, 그리고 2년 뒤인 2014년, 국회를 해산한 후, 다시 일본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제 97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한 현직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다. 아베는 그 자신을 단카이(團塊)세대<sup>5)</sup>와 신인류(新人類)세대<sup>6)</sup> 사이에 낀 시라케 세대(白け世代)<sup>7)</sup>라고 지칭하면서 이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층에 속한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은 정치家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라와 국가라고 하는 의식이 남들보다 강했다고 강조한다.<sup>8)</sup>

- 1) 일본국 제 97대 내각총리대신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2)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선박관련 수출입 무역회사인 효조상사 대표로 재직 중에 있음.
- 3) 일본국 제 97대 내각총리대신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4) 安倍晋三(あべしんぞ)、“美しい国へ”、文春新書 524、文藝春秋、2006.
- 5) 단카이 세대(団塊の世代) : 194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사람이 많아서 연령별 인구 구성상 두드러지게 팽대한 세대.-日韓辭典, 민중서림.(제2 개정판, 1973, 2007)
- 6) 신인류(新人類) : 종래의 세대와는 감성이나 가치관,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https://ja.wikipedia.org/wiki/新人類>
- 7) 백지세대(白けの世代) : 무슨 일이나 관심·감동이 없음. 만사에 흥미와 의욕을 잃은 현대 젊은이.-日韓辭典, 민중서림.(제2 개정판, 1973, 2007)
- 8) 安倍晋三(아베신조)、“美しい国へ”、文春新書、2006, p. 19.

以下는 책의 내용

## I. 일·미동맹의 구도

### 9.11은 미국을 변화시켰는가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공포의 늪으로 빠트린 뉴욕동시다발 테러이후 미국은 본질적인 것에서 부터 변했는가, 라는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은 테러리스트의 인도를 거부하는 아프칸에 군사공격을 하고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그 논쟁의 답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외교의 전통에는 독립선언과 헌법에 정해진 이상(理想)을 둘러싸고 대개 세 개의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고립주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이상보다도 국익을 중시하고, 국제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하는 현실주의적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주의적, 복음주의적인 사명감에서 미국헌법의 이념을 세계로 넓히려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이 세 개의 패턴은 어느 것이 미국 외교의 전면에 나서는 순서만 다를 뿐, 언제나 미국인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패턴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강경일변도의 조지 W. 부시정권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 극히 특이한 정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9.11 이후라고 해서 미국의 기본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미국인이 믿는 보편적 가치

그러면, 미국, 미국인이 믿는 보편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

미국은 신과 성서를 믿고, 종교탄압과 박해로부터 벗어나서 세계 속에서 신천지에 희망을 구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영국RHK의 전쟁을 거쳐 1776년, 독립을 쟁취하면서 탄생한 나라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누구로 부터라도 침해되지 않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권리에는 생존,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부터 시작하는 독립선언서를 기안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이념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가치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이상으로 추구했다. 제퍼슨을 비롯하여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제4대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초대 재무장관)등,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은 이 이상이야말로 미국의 기상이고 신에 의해서 그렇게 운명 지어졌다고 생각했다.

1803년에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1819년에는 플로리다를 스페인으로부터, 그리고 텍사스를 멕시코로부터 획득하면서 미국 서부방향으로 팽창해온 과정은 실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매니페스트 데스테니(Manifest Destiny, 명백한 운명)’<sup>9)</sup>을 보인 행동이었다.

미국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식이 이 독립선언에 새겨진

9) 이 용어는 1845년 존 오솔리안(John O' Sullivan)이 텍사스를 병합했을 때 미 의회에서 발언한 말이다. 이 용어는 제국주의적 확장을 미국인 스스로가 정당화시키고 있는 아메리카니즘이라고 함이 좋을 것이다. - 박원복, “오스바우지 지 안드라지의 탈식민주의 시각과 언어적 형상화”, Revista Iberoamericana 21.2(2010):103-130, p.1. 의 각주에서 인용.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절대 자신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식으로 자리 잡고 이것이 좋든 싫든, 또는 불손하든가 라고 하는 감정론은 제쳐두고, 이러한 청교도적 신앙과 사명감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성립시킨 원천인 것이다.

### 미국은 이미 고립주의를 버렸다

19세기 말까지 미국외교의 주류는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관은 미합중국 안에서 실현해야 할 것이고, 해외로의 관여는 건국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의식이 지배적이었고 특히 유럽에 대해서는 이 불간섭주의의 원칙을 관철시켰다. 미·영전쟁(1812-14년)이후의 미국은 유럽대륙으로부터 3천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무상으로 영위해 왔다. 그것도 고립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이다.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은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인이 타고 있던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독일의 유포트에 의해 격침되면서 미국은 2년 후 독일에게 선전포고한다. 그리고 전쟁종결 후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 미국대통령 윌슨은 국제연맹의 창설을 제안하고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는 이상을 구체화한다.

1929년에 시작된 세계공황은 유럽의 부흥을 지탱해온 미국의 호황에 타격을 주고 독일에 있어서 나치스의 등장을 촉발하게 했다. 1933년에는 히틀러가 독일 수상이 되고 영토 확장의 야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정권을 차지한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도 1935년에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 독일은 1938년 오스트리아의 합병을 단행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잇따라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 ‘미국은 자유의 이념을 세계에 넓히는 사명을 갖는다’라고 선언한 윌슨의 이상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은 미국외교에 결정적 변경의 계기가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고립주의를 버리고 자신들이 믿는 독립선언과 헌법에 새겨진 미국의 가치관을 세계로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 이상주의의 추구가 외교에 도입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이후 오늘날까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를 기본적으로 믿고 주장해 왔다.

### 미국보수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넓힌다는 명분으로 미국은 세계 군사비의 40%를 지출하면서 타국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보유하고 있다.

네오콘의 대표적 논객중 한 사람인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은 유럽과 미국의 세계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그의 저서 “낙원과 힘에 대해서(Of Paradise and Power)”에서 17세기 영국의 법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T. Hobbes)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년)’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힘을 설명하고 있다. ‘리바이어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이고 그 행동은 욕망에 지배되고 있다. 인간사회가 정글과 같은 세계이면서 만인의 자연의 권리인 사리사욕이 서로 충돌하면서 파괴적인 결말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한 ‘자연 상태’속의 인간의 인생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비열하고, 잔혹하고, 짧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폭력을 휘두를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계약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상태에서는 누군가가 (이것을) 위반하면 다시 원래의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사회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는 데에는 그 계약 속에 절대 권력을 가진 괴물, 즉, ‘리바이어던’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로버트 케이건은 이 ‘리바

이어던'이야말로 미국의 역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유럽은 그 힘의 축적을 게을리 한 탓에 결국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1980년대, 국가에 대한 강한 애착의 소유자였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Ronald Wilson Reagan, 1981-1989 재임)은 소련 연방을 '악의 제국'이라고 공격하면서 소련으로부터의 핵위협을 억제할 전략으로 소련의 핵미사일을 레이저 무기 등으로 중도에서 요격한다고 하는 방위계획(SDI = 전략방위구상)을 세웠다. 이 계획에는 팽창예산이 필요했지만 미국 국민은 "국민을 인질로 한 핵 억지전략은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유의 나라 미국이 결코 공포에 휩싸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레이건의 발언을 지지했다. 소련은 미국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거액의 군사비 지출을 견뎌내지 못하고 붕괴의 길을 걸으면서 이것이 동서 냉전의 종결로 이어졌다.

레이건은 정권말기에는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협정)을 체결하게 되지만 미국의 힘에 의한 승리는 분명했다. 레이건의 승리는 그대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의 큰 자신감이 되었다. 그들은 소련 사회주의 붕괴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올바름을 확신했다. 네오콘도 같은 부류였다. 단, 그들이 종래의 보수주의자와 조금 다른 것은 원래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개혁, 특히 정부의 관여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현재의 미국외교는 두 개의 방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첫째, 미국이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군사력만으로 의지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국과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등 국제적인 협조외교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이는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William Jefferson "Bill" Clinton, 1993-2001 재임)에서 국방차관보를 지낸 죠셉 나이(Joseph Samuel Nye, Jr.)로 대표되는 이른바 국제협력주의의 발상이다.

둘째, 혼돈의 시기야 말로 세계안정의 기초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불가결하고 미국과 이익이 상반하는 나라와 타협하는 것은 국익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를 불안정으로 빠지게 한다는 생각에서 미국은 초대국의 지위를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힘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이 세계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하는 단독행동주의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라도 미국의 이념을 믿고, 미국은 세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의 입장을 유지해야한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관은 다름이 없다.

흔히 일본에서는 미국의 민주당은 소프트하고, 공화당은 강경하다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은 미국의 역사를 보면 큰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정권이든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국가 이익에 있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본질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John Fitzgerald "Jack" Kennedy, 1961-1963 재임)은 1961년 1월 취임연설에서 "우리들에게 호의를 가진 자든, 적의를 가진 자든, 모든 나라들은 다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은 자유의 확보와 그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것이고, 어떠한 부담도 피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곤란에도 나아가 맞서고, 어떠한 친구도 돕고, 어떠한 적과도 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것과 같은 말을 했다면 “호전적이다”라고 평가할 것이다. 케네디는 자유주의의 대표 격이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각각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주장은 일관되게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미국의 민주주의 이론이란

미국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누구라도 생존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이념을 믿고 있는 개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이다. 따라서 그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개개인이 납득해서 결정한 권력과 제도이므로 그 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미국인은 미국적 가치가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 패전국 일본 헌법전문에 표기된 미국의 의지

점령군<sup>10)</sup>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최고사령관은 패전국 일본의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천황의 존치, 봉건제 폐지, 전쟁의 영구 포기의 세 개의 원칙을 세웠다. 특히 당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자세가 농후하게 나타난 것은 헌법 9조의 ‘전쟁의 포기’ 조항이다. 미국은 자국과 연합국 측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연합국의 대표로서 일본이 두 번 다시 서방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긴 헌법초안을 작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국가주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까지 포기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전력(戰力)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교전 권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일본에 부여해 준 것은 헌법전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제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고자 결의한다”라고 하는 ‘시혜(施惠)의 문구’이다. 즉, ‘일본국민의 안전과 생존은 일본 외의 타국을 신뢰하면서 그 모두를 맡겨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지가 담긴 문구는 실제로 일본국 헌법 제 9조의 전문(前文)이 되었다.

헌법 전문에는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에 대한 “사죄의 증언문(詫び証文)”과 같은 선언이 하나 더 있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專制)와 예종(隸從),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는 부분이다.

이 당시 아프리카는 물론, 거의 모든 아시아제국은 아직 독립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라는 것은 주로 연합국, 즉, 미국을 위시로 하는 열강의 전승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힘 있는 결의 표명과 같이 보이지만, 실은 “지금부터 우리(일본)들은 그러한 열강의 나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묘하게 자신을 낮추는 치사스러운 문언이 되었다. 前文에 아로 새겨진 ‘숭고한 이상’과 ‘항구적 평화’라고 하는 말에는 미국이 가진 스스로의 이상주의를 일본에서 실현해 보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 헌법 초안은 뉴-딜러라고 불리는 진보적인 젊은 GHQ(聯合國軍總司令部)의 스텝에 의해서 단 14일간의 단기간에 쓰여진 것이었다.

10) 일본의 패전으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가 일본에 상주(1945-1952)한 것을 아베가 이 책에서 ‘점령군’으로 지칭.

### “전력(戰力) 없는 군대”의 모순

당시 일본국 헌법 초안 작성에 임했던 민정국(民政局)마저 고개를 가우뚱했다고 일컬어지는 헌법9조의 규정은 일본의 독립국으로서 자격은 부여되지 않았다. 1950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 점령군이 한반도로 이전하자 맥아더 사령관은 전력공백 상태인 일본으로 소련이 침공해 오는 것을 우려해서 일본정부에 방위를 위한 부대의 창설을 요구했다. 즉시, 경찰 예비대가 조직되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국내의 치안유지를 위해서였다.

1951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조인을 하고, 주권을 회복하면서 정식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미안보조약이 체결되자 이번에는 국회에서 전쟁포기를 결정한 헌법 9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경찰예비대는 헌법에서 금지된 ‘戰力’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쟁이었다. 패전의 충격과 전쟁국가에 대한 국민의 알레르기는 전쟁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겹쳐서 예상 이상으로 이 논쟁은 크게 번졌다. 예비대의 설치가 일본의 요구가 아니라 연합국군의 지령에 의한 것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에 충실해야한다는 반응 쪽이 강했다.

이듬해인 1952년, 경찰예비대가 보안대로 개편됐을 때 요시다(吉田)내각은 “헌법에서 말하는 ‘戰力’이라는 것은 근대전쟁이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편성을 갖추는 것을 나타낸다. 보안대는 원래 경찰이었고, 이 정도의 실력(공권력)정도는 戰力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침략으로부터의 방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모순에 가득 찬 무리한 설명은 이 후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1953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수상은 국회의 자위대창설을 둘러싼 질의중에서 “戰力を 가진 군대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戰力 없는 군대”의 탄생이다.

1954년 보안대가 자위대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발족하면서 정부는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 국토를 방위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더욱이 헌법 제9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戰力’에 대해서도 ‘자위(自衛)를 위한 최소 필요한도를 넘는 것’에 있어서, 그 이하의 자위력은 戰力이 아니다. 따라서 자위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힌다. 이 후 역대 정부는 자위대의 존재와 헌법과의 합치성에 대해 헌법의 해석에 의해서 성립시키고자 노력 해 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구, 일·미방위조약에는 “자국의 방위를 위해 점증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기대한다.”고 일본의 향 후 행동 노력 목표까지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길을 밟게 되었다. 왜냐하면 창설 당시로부터 외국으로부터의 침략등 유사시에 대처하는 것은 미군이고, 자위대는 주로 국내의 치안유지에 임한다고 하는, 미군의 보완적인 역할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일본과 독일, 각자의 길

이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독립국으로서 점령군에게 제압당할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헌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력에 어울리는 최소한도의 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켜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생각은 또 하나의 보수정당인 민주당도 같았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원했던 것이다.

1955년의 안보합동(자유민주당의 성립,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실로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지만 이때의 일본은 패전으로부터 1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력회복이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한편으로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보장에 관해서 인식과 사고를 점점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아 버렸다. 경제성장과 경무장노선 -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관해 대부분을 미국에게 맡기는 선택이었다.

전후 일본은 군사비 비중을 가능한 한 적게 낮추고 다른 투자에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발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있다. 분명 전쟁에서 파괴된 기반 정비에 국가자원을 집중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후, 상당한 군사비를 투입하면서 중무장한 구, 서독도 일본과 같이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전쟁에서 패한 독일은 전승국인 미·영·불·소련에 의해 분할되어 점령통치 되지만 1949년, 자유주의국가인 미·영·불 삼국의 점령지가 서독(독일연방공화국)으로서 재출발하자 1955년, 주권회복과 동시에 국방군을 창설하고,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맹했다. 그뿐 아니라 서독은 동서독 통일때 까지 36회나 기본법(헌법)을 개정하고 그 중에서 징병제 도입과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 정비까지 실시했다.

말할 것도 없이 미·소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소련사회주의 위협에 대처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서방측의 요청도 있었다.

전 후(戰後) 서독의 초대 수상이 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949-1963 재임)는 1950년의 연방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건전한 의식과 감각을 가진 독일인이라면 모두 스스로의 고향, 스스로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일 겁니다.” 여기에는 항상 外敵에 맞서온 국민과, 군대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 더욱이 아데나워는 국민에게 남아있는 군대 알레르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1951년, 연방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다. “저는 오늘, 의회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이름을 빌려 선언합니다. 고귀한 군의 전통에 근거해서, 지상과 해상, 또는 하늘에서 싸웠던 우리들의 병사 모두를 우리들은 칭찬합니다. 독일군인의 명성과 위대한 공적은 과거 수년간에 수많은 욕을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태어나고 더욱이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공통의 사명으로서, 독일군인의 도덕적 가치를 민주주의와 융합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도 독일에 남아있는 징병제도의 존재이유는 직업군인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군대를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 둔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서독의 데오돌 호이스 초대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는 민주주의의 정통적 자식이다”라고 했다. 물론 민주주의국가로서 ‘양심적 기피’의 권리가 담보되어 있기는 하다.

반대로 일본의 전후는 어떠했는가?. 안전보장을 타국에 맡기고 경제를 우선시한 것으로 우리들은 물질적으로는 분명 큰 것을 얻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잃은 것도 많지 않았을까?

일본에서는, 안전보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곧, 군국주의이고, 국가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국가주의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전전적(戰前的)인 것에 대한 반발은 강하고, 이것으로 일본인의 행동이나 심리는 굴절되고, 좁아지게 되었다.

### 왜 일·미동맹이 필요한 것인가

1960년 일·미안전보장조약개정때의 교섭내용이 지금 겨우 밝혀지고 있지만, 이런 치사스러운 노력은 실로 자국에 있는 주둔군을 점령군으로부터 동맹군으로 바꾸는, 다시 말하면 일본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독자 힘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자국의 안전을 위한 최대한의 자조노력, ‘자기나라는 자기가 지킨다’라고 하는 기개(氣概)가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핵 억지력이나 극동지역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은 불가피하고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경제력, 그리고 최강의 군사력을 고려하면, 일·미동맹은 최선의 선택이다. 더욱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늘날 일본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자유로운 경쟁-시장경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의 자유주의국가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의 독립, 즉, 국가의 주권이고,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다. 물론, 지켜야 할 것의 범위에는 우리들 일본인이 쌓아온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포함된다. 자궁이라고 달리 표현해도 좋지만 그것은 다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역사를 밟아온 나라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행사할 수 없는 권리” 집단적 자위권

일·미동맹의 군사동맹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안보조약의 제5조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각각의 규약국은 일본국의 시정(施政)하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 어느 것이든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의 평화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또는 절차에 따라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위대는 오로지 수방위(守防衛)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타국으로부터 일본에 대해서 미사일이 한 발 발사되었을 때, 두 번째의 미사일을 피하거나, 또는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아니라 미군의 전투기가 그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미국의 젊은이가 일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약에 그렇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팔짱을 끼고 두고 볼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서 목숨을 걸은 병사, 병사의 가족, 병사를 보내는 미국 국민이 무엇보다 이것을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동맹은 ‘종이’가 아니라 ‘연대감’이다”라고 했다. 신뢰로 뒷받침된 연대감. 이것이 없는 조약은 단순히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이다.

현재 정부의 헌법 해석에서는 미군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 일본을 방위하지만,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예를 들면, 일본의 주변국의 유사시에 출동한 미군병사가, 공해상에서 조난당해서, 자위대가 그들의 구난에 임했을 때 적으로부터 공격 받는다면 자위대는 그 자리로부터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설령 그 미군병사가 자국인 구조의 임무에 임했다고 해도 말이다.

쌍무성(雙務性)을 높이는 것은 신뢰의 유대감을 키우고, 보다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을 보다 안전하게 하고, 결과로서 자위력도, 또한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권리가 있어도 행사할 수 없다. - 이것은 재산에 권리가 있지만 자기 자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금치산자(禁治產者)”의 규정과 닮았다.

일본은 1956년, 유엔에 가입했지만 그 유엔헌장 51조에는 “유엔가입국에게는 개별적이고 집단적 자위권이 있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개별적 자위권과 같이 세계 속에서 국가가 가지는 자연의 권리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일본국 헌법은 유엔헌장이 생긴 이후에 만들어졌다. 일본도 자연권으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통념 속에서, 권리는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통용될 것인가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책판단이고, 쉽게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1949년 유엔헌장에 기초해서 발족한 미국과 유럽諸國에 의한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는 집단방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자위권은 50년간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다. 행사된 것은 미국에서의 9.11 동시다발 테러 이후 아프간 공격이 처음이었다.

### “교전권이 없는” 것의 의미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 최소한의 무력으로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지혜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담보해 두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합리적인 일본의 방위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굳이 일본이 무력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도 이해되는 것이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일본은 한층 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미동맹에 있어서 쌍무성을 높이는 것은 오키나와기지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발언력은 한층 더 증강시킬 것이다.

한 가지 더, 헌법9조 제2항에는 “교전권(交戰權)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반세기동안 거의 神學論爭과 같은 논의가 반복됐다.

어느 나라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연의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交戰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동경 만에 대량파괴무기를 실은 테러리스트의 공작선이 접근해 와도 상대로부터 어떠한 공격이 없는 한 이쪽에서 무력을 행사해서 상대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헌법과의 괴리를 오로지 헌법적 ‘解

釋'으로 잡아내는 것은 실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 대의(大義)와 국익(國益)

2003년 11월, 특별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나는 정부의 이라크에 자위대 파견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이라크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가 아닌가는 논외로 하고, 최고 사령관인 총리는 국민과 자위관(自衛觀), 그리고 그 가족에게 이 파견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의의가 있는가, 즉, ‘대의(大義)’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한 이유는, 많은 일본 국민이 “일본은 내키지 않지만 미국에 의해서 억지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이라고 오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위대 파견의 大義는 무엇인가.

첫째, 국제사회가 ‘이라크인의,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인을 위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그 국제사회의 일원인 일본이 공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의식에서의 파견이었다. “이라크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가 아닌가가 문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위대는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다. 급수나 기반 정비 등의 인도·복구지원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치안이 악화되어 있다면 더욱더 파견의 명분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국제분쟁에 대해 매일 훈련을 하고 있었던 자위대야말로 분쟁 지역으로의 파견에 필요하고, 또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둘째, 일본은 에너지 자원인 원유의 85%를 중동지역에 의지하고 있다. 더구나 이라크의 원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이러한 경제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2003년 12월 9일, 당시 고이즈미(小泉)총리는 ‘이라크복구지원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자위대 파견의 기본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파견의 이유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직접 국민에게 전달했다. 자위대 파견은 결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 독자의 선택이고, 내각총리대신 스스로 발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 직접 어필했다.

### 돈으로 하는 원조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자위대가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된 것은 걸프 전쟁 뒤 정전이 발효된 1991년 4월이다.

당시 페르시아 만에는 이라크가 부설한 기뢰가 수 없이 남아 있었다. 일본의 (유류)탱크 선을 포함한 각국의 선박은 위협에 휩싸였기 때문에 기뢰제거를 위해 자위대는 처음으로 해외로 파견됐다.

걸프전쟁에서는 쿠웨이트에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서 유엔 결의에 의한 다국적군이 파견됐지만 일본은 헌법상의 제약으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어서 그 다국적군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 때 일본이 ‘자위대 파견을 대신해서’라고 제의한 것이 130억 달러라고 하는 거액의 자금 원조였다.

그러나 걸프 전쟁이 끝나고 쿠웨이트 정부가 워싱턴포스트지에 게재한 ‘미국과 세계 나라들에게 감사’이라는 제목의 감사의 전면광고 속에는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이름은 없었다.

이때 일본은 “국제사회에서는 인적공헌(人的貢獻) 없이는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을 지시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이 군사력의 행사에 엄격한 제약이 있어서 다국적군에 참가할 수 없었던 독일은 정전 성립 후 곧바로 인도지원의 명목으로 소해부대(掃海部隊, 바닷속의 기뢰 등을 제거하는 부대)의 파견을 결정했다. 이는 독일이 인적공헌의 의미를 알고 있었

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뢰제거는 선박이 운항하기 위한 안전 확보차원이기 때문에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미국, 프랑스 등 수 개국이 소해(掃海) 작업에 임하고 있었고 일본도 뒤늦었지만 소해부대의 파견을 결정했다.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그만큼 독일의 파견결정의 충격이 컸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일본정부가 해외파병의 근거로 한 것은 일본주변의 '선박운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위대법 제99조인 '해상자위대는 장관의 명령을 받아서 해상에 있어서 기뢰, 그 외의 폭발성의 위험물의 제거 또는 이들의 처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었다. 물론 야당들은 무조건 반대였다. "슬금슬금(조금씩)해외파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사회당은 당시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헌법위반을 하고 있으므로 먼저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전개했다. 일본은 전후 단 한 번도 무력행사를 행사한 적이 없다. 기뢰제거가 어째서 무력행사의 위험이 있는 해외파병이 된단 말인가. 더구나 일본은 종전 직후에 주변해역의 기뢰 1만개를 소해한 실적이 있고 소해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1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해정 4척, 모함, 보급함 구성의 각 한 척으로 된 페르시아 만 소해정부대가 우여곡절 끝에 조직되어 511명의 자위대원에 의해서 99일간에 걸친 기뢰제거 작업이 행해졌다. 그 결과 일본은 34개의 기뢰를 처리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전선을 확대했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눈에 보이는, 인적공헌의 본분을 최대한으로 모색해 왔다. 1992년 8월 PKO협력법(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법)의 성립은 실로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다.

알려진 대로 PKO라는 것은 유엔주도로 분쟁지역의 평화유지에 임하는 요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이 법률의 성립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자위대는 분쟁지역의 감시와 분쟁의 중재, 치안 회복, 복구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파견에 즈음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이 자위대를 분쟁 지역에 파견하려면,

1. 분쟁 당사자 간에 정전 합의가 성립되어 있을 것,
2. 분쟁 당사자가 PKO활동과 일본의 참가에 동의할 것,
3. 중립적인 입장을 엄수할 것,
4. 이들의 원칙이 하나라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즉시 철수 한다고 하는 규정 외에,
5. 自衛를 위한 무기사용은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른바 'PKO참가 5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당시 사회당이나 공산당등과 많은 매스컴은, 이 PKO법을 "헌법위반이고, 침략전쟁으로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2006년), PKO에의 참가는 도합 9회(2005년 11월 현재)에 이르지만, 자위대 파견에 반대했던 그들의 말대로 일본은 침략전쟁으로의 길로 들어섰는가.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려고 행동 했는가.

#### 무기사용이 제한된 상태로 분쟁지역으로

자위대가 처음으로 PKO에 참가한 것은 PKO협력법 성립 3개월 후인 1992년 9월, 파견 처인 캄보디아였다. 1979년에 탄생한 헨·사무린 정권과 폴·포트파등 3개 파와의 사이에 평화합의가 성립하고 12년에 이르는 내전은 종말을 고했다. 유엔 캄보디아 잠정통치기구(UNTAC)의

감시아래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다.

유엔 평화협력 업무에는 크게 나뉘서 정전상황이나 무장해제의 감시, 방치된 무기의 수집이나 처리 등의 '평화유지활동'과, 수송이나 보급, 또는 도로나 다리의 보수 등을 하는 '후방지원'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법안심의의 과정에서, 정전상황이나 무장해제의 감시, 방치된 무기의 수집이나 처리 등의 '평화유지활동은 이른바 본대(本隊)업무, 즉, PKF(평화유지隊)에 있어서 극히 위험하다고 해서 동결되어 버렸다.

국제협력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국회심의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만큼 논쟁이 일어나는데,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자위대와는 관련을 지우지 않고 문민을 주체로 하는 다른 조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하고자 한다면 군사행동을 동반하지 않은 민생부문에 한해서" 라고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이때도 그랬다. 정전이 어쨌든 성립됐다고는 하지만 무장해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약연기가 식지 않은 캄보디아에서 위험이 없다고 전제하고 활동이 가능한 것인가.

국론을 양분시키는 논의 끝에 일본은 자위대의 시설부대 600명의 파견을 결정, UNTAC의 지휘 하에 들어가서 국도(도로)보수공사의 임무에 임하게 되었다.

실제, 일본의 시설부대는 임무는 후방지원이었지만 소속된 곳은 UNTAC의 군사부문이었다.

선거감시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도의 포장공사를 중단하고 투표소의 순찰을 행하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언제 폴·포트의 무장 세력이 습격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원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무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현지에서는 통상적이지만 일본의 국회에서 특히 야당으로부터는 그러한 자위대 인원의 자위권을 위한 최소한의 무장에 대한 의견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 자위대가 일본국민을 지킬 수 없는 현실

다행히 자위대원에게는 피해는 없었지만 자위대 이외의 일본의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다. 일본정부는 자위대와는 별개로 민간자원봉사의 선거감시원과 현지 경찰에게 조언과 지도를 행하는 이른바 문민경찰관을 파견했었다. 1993년 4월에 선거감시원인 다나카 야스히토(田中厚仁)씨가 현지 사람들에게 사살되고, 이어서 5월에는 문민경찰관인 다카다(高田晴行)경부보가 무장그룹의 습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민경찰관들은 정전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에서 무장하지 않은 채로 무방비로 파견되고 있다. 그런데 왜, 自衛에 관해 능숙한 자위대원도, 그들을 지킬 수가 없었는가.

PKO법에서는 무기 사용이 자위의 경우 이외에는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경호업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이것이 당시 일본의 내각법제국의 해석이다.

정부는 자위대파견에 대해서 헌법상의 논의는 있었지만 문민에 대한 안전배려에 소홀했다고 반성했다. 그 안전배려라는 것은 무기사용이 무력행사가 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PKO의 참가를 중지하던가 또는 철수한다고 하는 것이었다.(1991년12월4일 참의원 본회의)

그런데 무장해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분쟁지역 안에서 각국이 평화의 실현을 향해서 위험과 등을 맞대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도 일본만은 무력행사는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평화활동의 중단이나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인가. 만약 헌법이라고 하는 제약을 역으로 이용해서 위험이 없거나 깨끗한 일밖에 하지 않으려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눈으로 본다면 주변국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평화활동을 하는 나라들은 일본을 교활한 나라라고 비난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캄보디아의 차안상황이 악화되는 속에서 육상막료장(陸上幕僚長, 육상자위대의 하나의 행정적 직책)은 “왜 자위대가 일본인을 지킬 수 없는 것인가”라고 고뇌하는 대원들에게 지혜를 짜낸 끝에 무기사용의 규정이 ‘자신과 같이 현장에 소재하는 다른 대원’이 있는 곳에 주목하고, ‘시설부대가 보수하는 도로나 다리에 대한 정보수집은 당연한 임무이며, 그 도중에 투표소에 들렸을 때 그곳에 있는 감시원은 ‘같이 소재하는 대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즉, 무기를 소지한 자위대원은 다리를 보수하거나 투표소를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민간인도 같은 업무로 파견 됐다면 이는 동료 자위대원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무기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분쟁현장의 실정과 실제, 일본 국내의 국회의 논의와는 많은 괴리가 있었다. 당시 일본 국회에서는 “총을 가지고 있으면 적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위험하다”든가 “기관총은 두 정이면 군사 활동이 되니까 한 정으로 하라”든가, 대개는 정서적인 논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적이고 사무적인 논의와 분쟁현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기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정으로는 180도밖에 커버할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기관총을 두 정을 장착하고 나서야 겨우 앞뒤 360도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 制限 투성이의 자위대의 행동기준

이러한 자위대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국제정세의 격변과 더불어 크게 변해왔다. 2001년 12월에는 PKO협력법이 개정되어, 동결되었던 PKF(유엔평화유지대)로의 참가가 해제됐다. 이것으로 지금까지의 후방지원을 비롯해서 정전이나 무장해제의 감시, 또는 방치된 무기의 수집·처분이라고 하는 폭넓은 국제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의 아픈 경험에서 무기사용의 제한도 정당방위의 범위 내으로 완화되었다.

종래, ‘자신 또는 자신과 같이 현장에 있는 다른 대원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밖에 무기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에서, 가까이 있는 외국인 PKO요원이나 피재민(避災民), 정부 要人이나 신문기자, 자원봉사원등도 ‘자기 관리하’에 들어있다고 규정하고, 방위할 수 있도록 되었다. 차량이나 물자가 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적용된다. 단, 자위대의 활동지역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협사격을 하거나 총구를 직접 위협인에게 향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규칙은 외국 군대에서는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이지만 자위대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군대의 기준이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부정적인 항목인 것에 대해서, 자위대의 기준은 “다른 것은 안 되지만, 이것만은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항목이라고 자주 일컬어지는 일본의 인식에 대해 위와 같은 행동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의 구속력이 강하고 정책판단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자위대를 둘러싼 논의가 변했다

2003년 7월, 일본은 이라크 전쟁 후 복구지원을 위해 ‘이라크 인도복구지원특별조치법’을 성립시켰다. 전쟁은 끝났다고는 하지만 국내치안이 안정되어있지 않은 이라크에서 지원활동을

행하는 것은 자위대 이외에는 없었다.

파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내가 “시대가 크게 변화 되었구나”라고 절실히 느낀 것은 자위대의 파견지역이 전투지역인가 어떤가라고 하는 국회논쟁이 행해진 때였다.

자위대를 이라크로 파견할 때에는 오히려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고, 자위대에 따뜻한 눈길을 주는 사람이 많았다. 이 결과 사마와(サマーワ, 전투 지역)에는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갈 수 있었다. 그 의미에서는 자위대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10년이 경과해서 성숙과정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 II. 일본과 아시아 그리고 중국

무엇이 중국을 발전시켰는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결과의 평등’, 즉, 인민이 힘을 합쳐서 빈부의 차이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나 생산수단은 국가가 관리하고, 정치경제정책은 인민을 대표하는 공산당이 계획하고, 그 지도를 토대로 행하는 것이 표면적인 국가 원칙이다.

중국에서는 1958년에 시작되는 ‘농·공업의 대증산정책 = 대약진정책(운동)’이 실패하고, 또한 1966년부터 1976년에 걸쳐서 전국토를 휩쓴 ‘문화대혁명’에 의해서 경제는 오랫동안 정체되고 말았다. 그런데 1978년 등소평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까지의 이데올로기 제일주의로부터 경제를 우선시하는 개혁개방로선으로의 방향을 정하자 경제는 점차로 성장해 갔다.

특히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는 개혁개방의 속도가 가속화 됐다. 1992년에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이 제기되어 인민공사를 폐지함과 동시에 많은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외자도입을 추진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원리가 싹튼 덕택에 할당량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원래의 비효율적인 생산시스템도 크게 개선되었다.

등소평은 시장경제를 철저히 유지시키는 大號令 ‘남순강화’을 내놓고 ‘선부론(先富論)’을 제창했다.

“먼저 풍족하게 되는 사람(지역)부터 풍부하게 하고, 풍부하게 된 사람은 가난한 측(지역)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그리고 경제특구로 지정된 심천(深圳)과 천진(天津), 상해(上海), 광주(廣州)등 연안지역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남순강화 후에는 GDP가 전년 대비 15% 증가라고 하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원래는 농민이나 노동자 밖에 될 수 없었던 공산당원 자격이 자본가도 될 수 있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사회주의 기둥의 하나인 ‘결과의 평등’ 대신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면서 높은 경제발전을 이뤄낸 것이다.

이러한 20년의 중국의 성장률은 연평균 대략 9%였다. 이로써 개혁개방정책은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 중국사회의 이상과 현실

그러나 급속한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효율이 나쁜 국영기업의 정리나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시장화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연안부와 내륙부 사이의 지역격차, 특히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벌려 놓았다.

도시주민의 소득은 대개 농민의 여섯 배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중국의 전 인구의 70%, 9억 명은 농민이다. '누구든지 평등한 사회'를 실현한다고 하는 공산주의 이상이라는 것에서 경제는 급성장했지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 하나, 중국에 있어서 골치 아픈 문제는 급속한 공업화에 의한 환경오염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CO<sub>2</sub>의 배출량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다. 중국은 지금, 에너지를 석유와 천연가스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수요의 약 70%가 석탄이어서, 이 때문에 이산화유황의 배출량은 세계 최대이다. 또한 장강(양쯔 강)과 황하등 7대 수계의 70%가 심각한 오염에 처해 있다고 하는 보도도 있다. 도시의 생활쓰레기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내륙부 경지의 토양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한편에서는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대담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을 이끌고 가는 정신적인 목표가 필요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에서는 '反日'이 그러한 벡터(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量))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 자유와 민주주의의 60년

2005년 5월, 나는 자민당 간사장 대리로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정부고관들과 회담을 가졌다. 이때는 중국에서 일어난 반일 데모가 화제가 되었던 탓일까, 일·중관계에 관해서 종종 질문을 받기도 했다. 나는 일·중의 오랜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들 일본인은 역사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사과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고관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지주의 하나였던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철학은 시장주의 경제의 도입에 의해서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지금, 그 대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경제성장’과 ‘반일애국주의’가 아닌가.”

나는 고이즈미 정권이 일·중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고 싶어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고, 반일 데모의 배경의 하나인 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가입문제와, 중국에 있어서 반일애국교육의 문제, 그리고 반일교육을 생성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등, 양국에 있어서, 논쟁의 엿박자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들의 반응은 놀랄 정도로 솔직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더구나 꽤 알기 쉬웠다.”

사실 미국의 고위층들마저 일·중간에 가로막힌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문제를 포함해서 그다지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분명하게 알았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서방을 향해서 아니 세계를 향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왔는가.

일본은 60년에 걸쳐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법률의 지배 하에서 겸허하게 국가를 만들고 국제공헌에 힘써왔다. 그 사이 호전적인 자세 등을 한번이라도 내보인 적

이 없다. 그런데도 국가 간에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면 예전의 전쟁에 대한 부채(부담감)의 마음으로, 줄곧 억누르고 오로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그 결과 걸핏하면 마치 이쪽이 죄가 있는 듯 한 인상을 세계국가(사람들)에게 제공해 준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은 과거 역사의 잘못에 대해서 중국에게 사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자주 일컬어지지만 사실은 정식으로 20회의 사죄를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05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21회째이다. 더구나 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ODA(정부개발원조)에 의한 중국에의 원조는 차관을 포함하면 3조 엔을 넘고 있다.

일본의 이웃국가인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물론 안전 보장상으로 매우 중요하다.

5년 전, 중국의 경제발전은 일본경제에 있어서 위협이라고 일컬어졌을 당시 고이즈미 수상은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 후의 일본의 경기회복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의한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지금, 경제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은 뿔레야 뿔 수 없는 ‘호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은 중국에 투자하므로 써 값싼 노동력을 손에 넣고, 제품을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의 투자에 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반제품(일본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많다)을 수입하고 그것을 제품화해서 수출하고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덧붙여서 2004년 일본의 대중국 무역총액은 대미무역총액을 상회했다. 일본기업의 대중직접투자액도 2004년에는 4천9백억 엔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더욱이 2004년은 전년 대비 19.8%나 증가했다. 같은 시기 일본 이외의 제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마이너스 0.5%였다. 고이즈미 정권이 시작된 2001년 이후 타국에 비교해서 일본의 대중국투자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실로 우리들이 추진해왔던 정책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거대하고 유망한 ‘소비 시장’으로서의 일면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분명하게 일본의 성장에 연결되어 있다.

### 일·중관계는 정경분리의 원칙으로

이러한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호혜관계’를 정치 문제 때문에 손상시키는 것은 양국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지, 결코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 앞으로의 일·중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양국 사이의 정경분리의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WTO(세계무역기구)에 가맹하면 어느 나라도 글로벌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WTO 협정에는 ‘가맹국의 무역정책 또는 무역관행에 대해서 한층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해를 깊게 한다’를 전제로, ‘관세, 그 외의 무역장해를 실질적으로 배척하는 것’, 또한 ‘무역통상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폐지하기 위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동의’로서 ‘관세 그 외의 과징금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신설하거나 또는 유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 만약 이러한 규칙에 저촉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글로벌한 세계에서는 위협으로 인식되어 버린다.



정치문제가 경제문제로 옮겨 붙지 않게 해야 한다.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를 이용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서로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 원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양국의 관계악화에 대한 브레이크가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상호 돌발적 상황을 억제할 수 있다.

일본이 아시아속에서 체제가 다른 큰 나라의 옆에 위치하고 있는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결코 놀라거나 과잉반응을 한다거나 해서 안 된다. 양국 간에 일어난 문제를 냉정하게, 그리고 최소한으로 컨트롤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중관계의 열린 미래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서 ‘항일 60주년’을 맞은 중국에서는 국민들에게서 반일행동이 격하게 나타났다. 2004년 여름, 중경(重慶)에서 열린 아시안컵 축구에서는 일본팀에 대한 거친 플레이가 결국 경기장 외부에서의 폭동으로까지 번졌다. 2005년이 되자 이번에는 중국연안부의 각지에서 반일 데모가 일어났다. 4월에 성도(成都)에서 시작된 데모는 북경, 심천, 상해로 불뚝이 튀었다. 그러나 이때 일본에서는 많은 국민이 반일 데모에 불쾌감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기에 불을 붙이는 젊은이도 없었고, 무리를 지어서 중국 대사관으로 들이닥치는 일도 없었다. 일본에 체재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반일 데모가 폭도화 됐을 때 “일본은 냉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외쳤던 평론가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이야 말로 냉정하라”라고 말하고 싶었다.

일본인은 옛날부터 도덕을 중시해 온 민족이다. 유교로부터 예절을 배우고, 불교의 禪으로부터는 스스로를 규율하는 정신을, 그리고 신도(神道)로 부터는 조상을 존중하고, 자연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왔다. 관용의 마음은 일본인의 특질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설령 나라와 나라사이에 마찰이 일어난다고 해도 상대나라 사람들에게는 변함없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한다. 이것이야 말로 일본인이어야 할 태도이고 우리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과는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상으로 밀접한 ‘호혜관계’가 쌓아질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중국의 유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더 알아주기를 바란다. 진정한 일본을 아는 중국의 학생이 늘어나면 일본에 대한 이해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유학생 수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데 노력해야 하고, 이들이 일본에서 취업기회를 늘리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중국에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배양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제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에너지효율은 극히 좋지 않다. 그런데 일본의 절약에너지 기술은 선진국 안에서도 그 기술이 뛰어나다. 이 분야의 협력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도 또한 세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 양국 문제는 상호 조정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이지만 국경(상호 의존관계)을 접하고 있는 나라끼리는 서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항상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반이 되는 경제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것은 이미

서술했다.

나라가 다르면 역사나 문화도 다르다. 양국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전부 일일이 연관 짓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서로 다름은 다름으로 해서 존중하는 것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일본과 중국은 서로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뇌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도 마찬가지이다.

일·한 양국은 지금 하루 1만 명 이상이 왕래하는 중요한 관계이다. 일본은 오랜 기간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흡수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의미에서 한류 붐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나는 일·한 관계에 관해서 낙관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과 법의 지배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로 일·한관계의 기초가 아닌가.

우리들은 과거에 대해서 겸허하고 예의바르고 미래지향으로 마주보는 한 반드시 양국의 관계는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국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EPA(경제연대협정)의 체결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새로운 아시아외교를 향해서**

지금 우리들은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을 추가한 5개국과 EPA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FTA(자유무역협정)의 틀을 넘어서, 투자, 지적재산, 노동시장의 개방 등에 대해서 더욱더 연대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이 더욱더 아시아로 열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전술한 한국, 남서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대만도 시야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지향하는 것은 “일본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또는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 바꿔 말하면 누구라도 기회가 있는 나라이고 능력이 넘치는 나라이다.

일본의 특성과 그 이상에 공감하고 “아이들을 일본에서 키우고 싶다”, 또는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크게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일본의 다이너미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본사회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고, 확고한 법의 지배하에 있다. 또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과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아시아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지금 인도가 주목받고 있다. 내가 인도를 방문한 때는 2005년 3월이었지만, 그 뒤 고이즈미 수상이 방문하고 더욱이 일본 경단련과 젊은 벤처기업가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 일본, 인도, 호주, 그리고 미국과 연대

인도의 인구는 현재 10억 정도지만 앞으로 더 증가하고 아마도 16억에 달한다고 일컬어진다. 인도에는 근면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고, IT분야에서는 아시아에서 선진국의 하나이다. 인도와 관계를 더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원래 나의 외조부인 키시 노부스케(岸 信介)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네루 수상이 來印을 환영하는 군중을 향해서 “지금까지 종주국인 영국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은 일·러 전쟁에서 러시아에 승리했다. 나도 인도의 독립에 일생을 바칠 결심을 했다.”라고 연설을 한 적이 있지만 인도의 여론조사에서는 친근함을 가지는 나라의 넘버원으로 항상 일본이 오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 인도와 일본의 교류는 깊지 않고, 경제관계도 희박하다. 지금까지는 ‘짝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 전, 일·중 무역량이 홍콩을 포함해서 일·미를 상회한다고는 누구라도 예상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10년 후에는 일·인관계가 일·미, 일·중을 상회한다고 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다.

아시아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ASEM(아시아유럽연합), ASEAN(동남아시아 諸國연합) + 3(일·중·한ASEAN수뇌회의), 동아시아썬미트 등 일본이 참가한 멀티회의가 존재한다. 향후에는 6개국협회가, 북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틀에서 동아시아 안보의 틀로 발전할 지도 모른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너지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日·米·韓·中·印·露·ASEAN등에 의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대화의 신설도 구상되고 있다.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협력의 장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열린 아시아’로도 이어지게 된다.

앞에서 서술한 친일적인 민주주의국가인 인도와 2006년에 일·미·豪 각료급 전략대화의 개최를 성공시킨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다.

日·米·印·豪 4개국(아시아·대양주 데모크라틱 G3 + 미국)의 수뇌 또는 외상급 회합을 개최하고,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 이러한 보편적 가치관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기 위해 어떻게 공헌하고, 노력해 갈 것인가에 관해 전략적 관점에서 협의를 행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더 없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구축은 에너지 전략상,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이 서양과 동양의 접점에 위치한 친일국가 터키와의 전략대화를 시야에 넣음으로써 일본외교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이상 -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 아베신조(安倍晋三) 2006. 7. 20

##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를 읽고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하면 ‘독립(Independence)’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독립정신(The spirit of national independence, 独立精神), 또는 ‘자립(자립정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는 이 책에서 ‘독립(자립)’ 쟁취 상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가적 결정에 대한 표현으로 ‘독립(자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베는 이러한 ‘독립(자립)’은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은 특히 이것에 목말라 있다고 주장한다. 아베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외정책에 대한 국가적 ‘독립(자립)’의 의미는 주로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독립(자립)’을 통해 일본이 주변국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 - 아베는 이것을 세계사적으로 해석<sup>11)</sup>- 에 대한 역사 해석권을 일본인에게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현실적 현상은 아베정권에서 결정된 헌법 해석권 문제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책,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아베는 역사에 대한 해석권은 모든 국가의 고유의 주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역사적 자부심으로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단 하루가 지난 역사라도 이것을 해석하는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현실 세계이다. 일본이 역사 해석의 권한을 늘려가고 있고 그 시기적 기간은 차츰 최근의 역사로 접근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베는 ‘아름다운 나라론’을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베의 정치적 의지가 담긴 이 책에 대해 한국에서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제1쇄 발행시기인 2006년 7월부터 아베총리의 취임 후인 12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sup>12)</sup>을 통해 검색용어 ‘아베’, ‘아름다운 나라’,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로 검색한 결과, 직접 언급된 신문 보도는 한겨레의 ‘일본, 아름다운나라로 다져졌나(2006.9.2)’와 경향신문의 ‘우려스러운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2006. 9.2)’정도였다. 그 외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로...아베정권 대국민 캠페인(2006. 12. 31)’이라는 기사에서 ‘전통문화, 일본의 진수 100선 선정, 아름다운 문장 그림, 사진등의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보도하며,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의 사설에서도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의 개념과 책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한 두 문장으로 다루는데 그쳤다. 그리고 2006년 9월, 아베의 총리 취임에 대해 한국의 언론이나 주요 방송사들은 아베의 보수 우경화 우려에 대한 내용보다 일본의 신임 내각총리대신의 부인인 아베여사가 열렬한 한류 팬이라고 하는 내용을 압도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일본과 아베에 대해 한국의 언론과 관계자 등의 문제의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본 글은 일본 정치인의 숨은 의도에 무관심하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발언이나 행동에만 반응하는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들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일반인들의 의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아베의 글을 가감 없이 번역한 글이다.

11) 20세기 초 일본의 전쟁행동은 대 서양에 대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상 변경에 대한 의지의 표출이었다고 일본의 보수세력은 주장한다. 즉, 동아시아의 서양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당시 가장 근대화한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동아공영권의 주된 주장이다.

12) 한국언론진흥재단 [www.kinds.or.kr](http://www.kinds.or.kr)